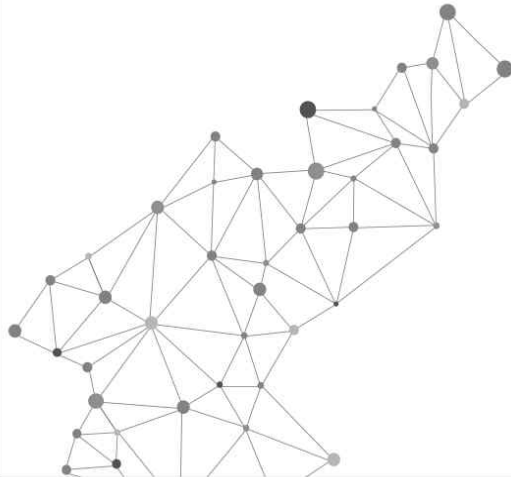


부문별 주요 기사

1월 1일~1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월 1일~1월 31일

대내경제 136

<공식경제>

北, 대북제재에 대응해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 강조
생산책임제 도입을 위해 인민반 중심으로 기층조직 재편

<전력>

시·군 단위 중소형 전력 발전소 복구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

<농업과 식량>

FAO, 올해 북한에 농업지원사업 진행

<보건>

북한서 신종독감 확산...8만여명 감염, 4명 사망

<생산 및 시장>

대북제재로 인해 생필품 및 휘발유 가격 급등
북한 타이어 생산 심각한 위기

<주민생활>

북한 내 반중감정 확산과 중국산 제품 판매 단속
신년사 관철 위해 북한주민 동원에 나서

대외경제 141

<대북제재>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활동과 회원국의 참여율 증가
유류 밀수와 해외 합작투자 지속으로 대북제재 허점 드러나
벤쿠버 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위한 국제사회 공조 확인

<북중관계>

대북제재로 지난해 북중 무역 큰 폭 감소
중국 상무부,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
북한기업 폐쇄시한 종료로 北무역회사 대부분 철수

대내경제

<공식경제>

매일경제(1.1), 데일리 NK(1.3), 조선일보(1.12), 한국일보(1.12), 동아일보(1.13), RFA(1.17), 연합뉴스(1.22)

北, 대북제재에 대응해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 강조

유엔안보리의 초강경 대북제재에 대응해 북한이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을 연일 강조함.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순수과학 연구소인 국가과학원을 찾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대북제재 돌파를 주문함. 김정은은 집권 이래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군 또는 민생시설을 번갈아 방문했으며 2017년에는 가방공장을 방문함. 따라서 올해 첫 공개 활동으로 과학 연구소를 시찰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북제재 돌파뿐만 아니라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또한 1월 22일자 노동신문에서도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위대한 당의

영도가 있고 믿음직한 과학자대군이 있기에 두려울 것도, 점령 못 할 요새도 없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과학기술 결사전에 총매진 하여야 한다.”며 경제 각 부문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주체화를 강조함.

생산책임제 도입을 위해 인민반 중심으로 기층조직 재편

북한은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생산목표를 정하는 ‘생산책임제’를 2014년부터 평양전선공장 등 일부 공장기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음. 그러나 올해부터 ‘생산책임제’를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임.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향후 공장기업소를 통한 국가 과제 하달 및 주민 동원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여 인민반을 중심으로 기층조직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함경북도의 경우 새해에 “거름생산 과제를 공장기업소가 아닌 가정세대들에 부과하고 거름생산 총화도 인민반별로 짓도록 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또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앞으로 당이나 근로단체를 통한 인원통제도 어렵게 되어 주민통제수단을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함.

<전력>

데일리 NK(1.1), 중앙일보(1.1), RFA(1.31), 뉴데일리(2.1)

시·군 단위 중소형 전력 발전소 복구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2018년 북한의 전기부문 발전 계획을 발표함.

이와 관련하여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이 각 시·군 단위의 중소형 발전소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가동 중단한 발전소들을 복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함.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2004년에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단위에 50kw이상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 소규모 댐이나 물레방아와 같은 설비를 중소형 발전소로 지정함. 이런 식으로 전국에 총 4,00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자, 2004년에 지방공업 공장들과 농촌양수장에 설치된 소형발전소들은 중소형발전운영사업소에 등록하여 남겨두고 나머지 발전 능력이 500kw 이하인 발전소들

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지역의 경우 2004년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남은 중소형발전소들이 131개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올해 북한이 2004년에 생산 가동 중단된 중소형 발전소들까지 복구하여 전력생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임.

〈농업과 식량〉

RFA(1.22), 연합뉴스(1.23), VOA(1.25)

FAO, 올해 북한에 농업지원사업 진행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농업 환경 개선과 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시설 지원 5건, 자금 지원 2건 등 모두 7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지원 사업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경사지를 농경지로 개간하거나 우수 품종의 채소 씨앗을 개발하는 등 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밖에 북한은 오는 2021년 까지 아시아 태평양 식물 보호위원회(APPPC)가 집행 중인 환경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짐.

〈보건〉

뉴데일리(1.29), 연합뉴스(1.29), 조선일보(1.29), 동아일보(1.30), VOA(1.30)

북한서 신종독감 확산... 8만여명 감염, 4명 사망

국제적십자사(IFRC)는 1월 26일 발표한 '북한 A형 인플루엔자 발병' 보고서를 통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16일 사이 북한에서 8만 2천 여 명이 A형(H1N1)신종독감 감염되었으며, 이 중 4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신종독감은 현재 북한 전역에 퍼진 상태이며, 그 중 29%는 평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연령별 감염자로는 17세 이상이 전체의 52.7%, 0~7세가 24.5%, 8~16세가 22.8%를 차지함.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위해 북한은 세계보건기구에 신종독감 백신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보건 관계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백신 3만 5천여 정을 지원하였다고 보도됨. 국제적십자사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IFRC

재난구호긴급기금 투입 여부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짐.

〈생산 및 시장〉

RFA(1.1, 1.9), 중앙일보(1.5), VOA(1.26)

대북제재로 인해 생필품 및 휘발유 가격 급등

유엔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시장의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임.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신문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한 북부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연료 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17년 12월초에 1kg 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5,990원과 6,765원(북한 원)으로 관찰되었음. 이는 전달인 11월에 비해 각각 25%, 60%이상 떨어진 가격임. 그러나 2018년 1월에 들어와서 휘발유 가격은 1kg 당 26,000원, 경유는 1kg 당 17,000원에 거래되며 전달보다 6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료 값 상승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보도임.

생필품의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한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평양 기준으로 2017년 11월에 북한 돈 51,000원에 거래 되던 식용유 5리터가 2018년 1월에는 57,000원으로 올랐으며, 옥수수 1kg의 경우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도함. 옥수수가 대부분 북한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이유로 도시지역 중하층 주민들이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묵은쌀을 소비하는데 최근 중국산 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체재로 쌀과 섞어먹을 수 있는 옥수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신문은 분석함. 이와 함께 유엔안보리가 원유수입 제한 조치 내용을 대북제재에 포함함에 따라 북한 내 유통비용이 상승하여 옥수수 가격도 오른 것으로 분석함.

북한 타이어 생산 심각한 위기

2015년 기준 북한의 자동차 대수는 27만대(인구 100명 당 한 대)로 알려져 있음. 북한 자체 생산 타이어 공장은 만포타이어 공장(압록강다이아공장)이 유일하며 북한은 타이어 생산을 위한 고무원료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17년 12월 26일 북한이 고무 수입을 하던 태국(북한과 네 번째로 큰 교역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 타이어 생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과 태국의 교역규모는 150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임.

실제로도 북한의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7년 12월 15일 박봉주 내각 총리의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시찰 사진에 찍힌 대형 트럭의 타이어가 크게 손상된 모습이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만포타이어 공장을 방문하여 “각종 다이아를 우리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함.

〈주민생활〉

RFA(1.4, 1.16), 뉴데일리(1.16), 데일리 NK(1.24)

북한 내 반중감정 확산과 중국산 제품 판매 단속

최근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 사이에 반중정서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보도임.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진시 동단위 여맹회의에서 주민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맹 간부가 “일본은 백년 숙적,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고 까지 발언한 것으로 전해짐.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에 러시아산 신형 전파탐지기까지 추가 설치하여 국경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이 신형 탐지기는 정보 외부 유출입 단속을 위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통화 위치와 내용까지 즉시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이러한 분위기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자강력 제고와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반발로 전국 시장에서 각종 중국산 공산품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는 소식임. 이에 상인들이 중국 상표를 떼고 북한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며 중국산 물품 유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임.

신년사 관철 위해 북한주민 동원에 나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주민들이 일체 부담하게 한다는 소식임. 함경북도에서는 중앙에서 각 도마다 ‘로인요양시설’ 건설을 지시했으며 이에 세대당 당 1인당 10kg의 옥수수를 상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돈을 바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대외경제

<대북제재>

조선일보(1.3), RFA(1.4, 1.29), VOA(1.4, 1.12, 1.23, 1.30), 아시아경제(1.15), 이데일리(1.15), 헤럴드경제(1.16)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활동과 회원국의 참여를 증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활동 내역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보고 기간 말까지 대북 제재 관련 79명의 개인과 54개 단체 및 기관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힘. 2016년 보고서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를 18건으로 추정하였으나 올해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음.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전문가단의 회원국 방문과 회의 개최 및 서신 교환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음. 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각 회원국의 참여율도 높아져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단일 이행보고서로는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겼으며, 이후 채택된 2321, 2371호에 관해서도 각각 94개, 43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이행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 역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라오스는 북한과의 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작사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되어 온 폴란드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결의 2397호에 따라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계획임을 밝힘. 몽골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신규 신청 및 갱신을 중단하고 오는 6월까지 1천여 명을 추방할 계획이며, 양골라 정부도 북한 건설회사인 '만수대'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이 회사에 소속된 북한인 노동자들에게도 귀환 조치를 취할 예정임.

유류 밀수와 해외 합작투자 지속으로 대북제재 허점 드러나

공해 상 유류 밀수와 해외 합작투자 지속으로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사례가 재차 확인됨. 미군 등 각국 함정은 지난해 10~12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국적을 위장한 북한 선박이 러시아, 중국 등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아 밀수한

정황을 포착함. 작년 말 북한과의 유류 밀수 혐의로 여수·평택항에 억류된 선박 2척의 소유주는 모두 중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기타 선박들 역시 선적을 바꾸는 수법을 이용해 제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제재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기업들이 북한과 공동 사업을 지속하며 북한에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임. 해당 사례로는 북한 우편통신부와 합작투자한 모바일 자회사 '고려링크'를 두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북한에서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태국의 '차룅 타이 와이어 앤드 케이블 컴퍼니' 등이 있음.

밴쿠버 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위한 국제사회 공조 확인

한국, 미국, 일본 등 20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15~16일 이틀 간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에 내려진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함.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이 국적을 세탁해 유류를 밀수하는 과정을 포착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의 90%를 제한하는 결의 2397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대북 해상차단 전력지원과 정보교환을 촉구함. 참가국 장관들은 기존의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행동을 고려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밀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힘. 그러나 본 회의에는 북한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북중관계>

조선일보(1.8, 1.31), 문화일보(1.9), 동아일보(1.10, 1.11, 1.12, 1.15), RFA(1.15, 1.16, 1.29), VOA(1.29)

대북제재로 지난해 북중 무역 큰 폭 감소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12월 북중 무역액은 총 3억 1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5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6% 감소한 5천 434만 달러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냄. 북한의 대중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수입은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7년 만에 최저치를, 대중 무역 적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중국 상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난해 2월 이후 급감했으며, 대중 수입액도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증감률을 나타내었음.

중국 상무부,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 관련 조치로서 6일부터 철강, 금속, 기계 및 차량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와 원유 및 정제유 수출 제한, 일부 곡식과 농산물, 광석과 목재 등의 대북 수입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힘. 중국 철강 제품의 대북 수출은 물동량과 금액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조치 시행 직후 단둥 현지에서는 양국을 운행하는 화물트럭의 수가 전례 없이 감소했다고 전해짐. 추가 제재 조치에 맞춰 접경지역 일대 부두들에서는 대대적인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도 시작되었다고 알려짐.

북한기업 폐쇄시킨 종료로 北무역회사 대부분 철수

‘120일 안에 각국 내 북한 기업 폐쇄’를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설립된 북한기업을 대상으로 공표한 폐쇄시한이 9일 종료되었음. 무역회사와 북한식당을 비롯한 상당수 북한기업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며 일부 업소만 중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편법을 이용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사이버해킹과 탈북단속 사이트로 쓰였던 칠보산호텔과 류경호텔도 폐쇄 대상이 되어 북한의 대외공작망이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짐. 중국의 강경책에 대한 반발로 북한 당국도 무역기관들에 교역을 위한 중국진출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합작 금지’ 조항에 따라 북한 내 중국 기업들에게도 폐쇄조치가 내려져 북·중 우의의 상징이었던 금평자동차합영회사, 평진자전거합영회사, 백산담배합영회사 등도 예외 없이 모두 폐쇄·철수 대상에 포함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1.2, 1.8, 1.17)

아래 표는 1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카리타스 (독일 국제단체)	2018년(계획)	지원사업	노인복지, 온실건설	신의주 양로원 건설을 위한 건축자재를 확보했으며,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공사는 봄에 시작될 예정 이라고 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미국 대북구호단체)	2018년(계획)	지원사업	식수·수도 시설 신설 및 개보수	식수 시설에 10만 2,000 달러 배당, 수도시설 개선 사업 지속할 것임을 밝힘.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민간구호단체)	2018년(예정)	기술지원	양식장 기술 지원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양식장의 물고기 생산증량 과 더불어 농장 체계를 갖 추기 위한 기술 지원 사업 진행 예정임.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1.01] 김정은, 대북제재에 부담 느꼈나…'절약·자립' 강조 **(매일경제)**
- [2018.1.01] 북한 신년사에 드러난 '발등의 불' **(중앙일보)**
- [2018.1.01] 유엔제재와 북한 타이어 생산 위기 **(RFA)**
- [2018.1.01] [전문] 2018 김정은 신년사 **(데일리 NK)**
- [2018.1.02] 카리타스, 북 노인복지·온실사업 확대 추진계획 **(RFA)**
- [2018.1.03] 북한과 거래의심 중국해운사 한국배까지 사들여 국적세탁 **(조선일보)**
- [2018.1.03] “北, 2018년 대북제재에 주민동원 ‘150일 전투’ 전개 가능성” **(데일리 NK)**
- [2018.1.04] 북, 주민들에 반증감정 고취 **(RFA)**
- [2018.1.04] 유엔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공개 **(RFA)**
- [2018.1.04] 유엔 대북제재위 “유엔기구들, 북한 관련 활동 제재 위반 우려” **(VOA)**
- [2018.1.05]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 생필품 가격 올라” 마이니치 **(중앙일보)**
- [2018.1.08] CFK, 간염·결핵 등 50만 달러 3대 새해 대북사업 **(RFA)**
- [2018.1.08] 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 정제유도 제한 **(조선일보)**
- [2018.1.08] 폐쇄 시한 D-1인데…베이징 北해당화 식당은 영업 중 **(조선일보)**
- [2018.1.09] 북한 연료값 한 달 새 60% 이상 폭등 **(RFA)**
- [2018.1.09] 중국내 北무역회사 대부분 철수 일부 식당만 문 열고 “정상영업” **(문화일보)**
- [2018.1.10] 중국내 ‘北공작원 거점’ 선양 칠보산호텔 폐쇄 **(동아일보)**
- [2018.1.11] 中 선양서 활동하던 北해커팀 철수 **(동아일보)**
- [2018.1.12] 북한 우방국 라오스 “북한과의 무역 없어…추가 노동자 허가도 안 해” **(VOA)**
- [2018.1.12] 해커-탈북단속 아지트 잇단 폐쇄…“北대외공작망 붕괴 수준” **(동아일보)**
- [2018.1.12] 北김정은, 국가과학원 시찰…“적들이 100년 제재해도 돌파 가능” **(한국일보)**
- [2018.1.12] 北 김정은 “적들이 100년 제재해도 뚫지 못할 난관 없어” **(조선일보)**
- [2018.1.13] 김정은 “100년 제재해도 뚫는다”… 풍계리선 새 강도 공사 징후 **(동아일보)**
- [2018.1.15] 북·중 교역 지난 달 ‘반 토막’…백악관 “환영” **(RFA)**
- [2018.1.15] “北, 아프리카 선적 선박으로 유류밀수…정기적으로 선박바꿔” **(아시아경제)**
- [2018.1.15] “北에 못 하나도 못 들어가요” **(동아일보)**
- [2018.1.15] “北, 해외 합작투자로 여전히 막대한 외화벌이”-WSJ **(이데일리)**
- [2018.1.16] 2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 “남북대화 지지…외교해법 필수” **(헤럴드경제)**
- [2018.1.16] “미국이 이상한 모임 만들어 북핵 논의”…中, 밴쿠버회의 맹비난 **(헤럴드경제)**
- [2018.1.16] 북, 요양시설 신축자금 주민에 떠넘겨 **(뉴데일리)**

- [2018.1.16] 북, 요양시설 신축자금 주민에 떠넘겨 (RFA)
- [2018.1.16] 새해 들어 북-중 무역 급감 (RFA)
- [2018.1.16] 틸러슨 美 국무, '대북 해상차단'위한 전력지원 촉구 (헤럴드 경제)
- [2018.1.17] 북, 생산책임제 도입으로 인민반 통한 주민통제강화 (RFA)
- [2018.1.17] 프NGO, 벨기에·베트남 대학과 협력해 북창양어장 지원 (RFA)
- [2018.1.22] FAO, 올해 북한에 7건 농업지원사업 진행 (RFA)
- [2018.1.22] 北매체, '과학기술로 대북제재 돌파' 연일 강조 (연합뉴스)
- [2018.1.23] "FAO, 올해 북한서 농업지원사업 7건 진행" (연합뉴스)
- [2018.1.23] 폴란드,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 송환...새 제재로 시기 앞당겨 (VOA)
- [2018.1.24] 北, 제재 적극 동참에 반발?...“돌연 중국산 제품 판매 단속” (데일리 NK)
- [2018.1.25] FAO, 올해 북한에 7건 농업 지원 사업 (VOA)
- [2018.1.26] [평양은 지금] "휘발유 지난 봄보다 3.5배 올라...대외 금융거래 안 돼 어려움" (VOA)
- [2018.1.29] VOA "북한서 A형 독감으로 4명 사망...8만1천640명 감염" (연합뉴스)
- [2018.1.29] 몽골 "북 노동자 1천여명 추방 예정" (RFA)
- [2018.1.29] "북, 무역회사들의 중국진출 중단 선언" (RFA)
- [2018.1.29] 북한, 대중 수출 7년만에 최저...적자폭도 사상 최대 (VOA)
- [2018.1.29] 북한서 신종플루로 4명 사망...8만명 감염 (조선일보)
- [2018.1.29] 北댈친 '공포의 바이러스'...8만2천명 감염 (뉴데일리)
- [2018.1.30] 북한서 신종독감으로 4명 사망 ... 8만 2천여명 감염 (VOA)
- [2018.1.30] 앙골라 "북한 노동자 모두 내보내"...아프리카에서 북한 입지 축소 (VOA)
- [2018.1.30] 北에 신종독감 확산... 8만여명 감염 (동아일보)
- [2018.1.31] 북, 오래된 중소형발전소 복구 지시 (RFA)
- [2018.1.31]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쌌다 (조선일보)
- [2018.2.01] 북한도 '신재생 에너지'? 전력난에 폐쇄 수력발전소 재가동 (뉴데일리)